



배포일자 : 2026년 1월 14일(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쿠팡 사태로 입점업체 매출 최대 90% 급감... 쿠팡은 '피해 실체 없다'며 책임 회피
- 오세희 위원장, "사고는 쿠팡이 냈는데 피해는 소상공인 몫... 사과와 즉각적인 보상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오세희)는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오세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수도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연대발언 및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 소개순으로 진행되었다.

쿠팡 사태는 전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을 확산시켰고, '탈쿠팡'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입점업체의 피해로 전가됐으며, 일부 업체는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하고 주문이 사실상 중단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에는 "쿠팡 사태 이후 주문이 끊겼다",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한 달 만에 30% 넘게 줄었다", "쿠팡 PB 출시 이후 상품이 밀려나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절박한 호소가 접수되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판매자에게 단가 인하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점업체 피해는 쿠팡의 불공정 운영 구조와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쿠팡은 △최대 60~90일에 달하는 정산 지연과 이를 활용한 최대 18.9% 수준의 고금리 대출 유도, △과도한 광고비·판매촉진비 수취, △자사 PB 우대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으로 상품 노출 구조 왜곡, △PB 제조단가 인하 요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의 즉각적인 보상, △자사 PB 우대 알고리즘 등 부당고객유인 즉각 중단, △광고비·수수료 구조의 전면 공개와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사고의 책임은 쿠팡에 있는데 피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사과와 보상 없이 ‘피해 실체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담보로 한 플랫폼 성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거래 구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수도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소상공인 60여 명이 참석해 쿠팡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끝.

- 첨부 1. 기자회견문
2. 소상공인 피해사례 (신고센터 접수내용)
3. 현장 사진

<쿠팡 입점 소상공인 · 중소기업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국회의원 오세희입니다.

저희는 오늘 쿠팡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75%에 해당하는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닙니다. 플랫폼의 관리 책임 방기가 어떻게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로 전가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 쿠팡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탈쿠팡'으로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하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쿠팡은 △최대 90일의 납품 대금 지연, △대금 지연을 활용한 연 18% 수준의 고금리 대출, △최대 9%에 달하는 광고비 수취, △자사 PB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과 리뷰 조작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쿠팡 사태 이후 수차례 청문회를 열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입점업체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답변은 끝내 "피해 실체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쿠팡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입점 소상공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쿠팡은 최근 5년간 미국에서 로비자금으로 약 150억 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뒤에 숨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누리면서도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상생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현장의 피

해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8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 중인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주문이 뚝 끊긴 판매자, △매출 급감 속에서도 단가 인하를 강요받는 업체, △쿠팡 자체 PB 출시 이후 누적 손실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사업자 등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미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쿠팡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소상공인과 함께, 쿠팡이 책임질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비자는 집단적으로 '탈쿠팡'에 나섰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가장 약한 고리인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쿠팡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하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둘째, 자사 PB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공개하라!

쿠팡은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PB를 만들고, 이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PB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며 입점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

에도, 쿠팡은 이를 부정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검색 순위와 가짜 리뷰 조작이 단순한 상품 추천일 뿐 부당한 행위가 아니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거래금액의 약 9.5%에 달하는 광고비 명목의 수수료 수취를 즉각 중단하라!

쿠팡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판촉비·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약 2조 3,424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60일에서 90일이라는 정산 주기를 운영하면서, 빠른 정산을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정산 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연 18.9%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습니다.

거래업체가 받아야 할 돈을 묶어두고, 그 돈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권하면서 이를 상생이라 말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쿠팡이 진정으로 상생을 말하려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입점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쿠팡에 거듭 요구합니다.

△탈쿠팡으로 인한 입점업체 매출 급감 대책 마련, △자사 PB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리뷰 조작 사과 및 피해보상, △자사 PB 가격경쟁력을 위한 제조단가 후려치기 중단, △광고비 명목의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 수취 구조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노동법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보상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한 성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쿠팡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책임질 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쿠팡 입점 피해 소상공인

중기부 주관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 피해 유형 1 : 쿠팡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 피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저희 매장에는 주문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끊기다시피 했고, 준비해 둔 재고만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했지만, 쿠팡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매자에게 단가를 더 낮추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만 주목하지만, 그 유출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쿠팡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을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 피해 유형 2 :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쿠팡은 판매자의 동의도 없이 상품 노출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최저가 정책과 발주통제로 입점업체를 압박해 왔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출입니다.

농산물과 제조 상품은 미리 원물과 재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주를 끊어버리는 순간, 남은 재고는 모두 손실이 됩니다. 회송비와 보관비, 폐기비까지

모든 비용을 소상공인이 떠안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인 재고 앞에서, 버텨온 시간 까지 무너집니다.

쿠팡은 소비자에게는 '선환불'로 책임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그 비용과 책임은 입점업체에 전가됩니다. PB상품으로 기존 제품을 밀어내고, 납품가는 반토막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계약 해지로 답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 갑질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 피해 유형 3 :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한 피해

살아남기 위해 지난해부터 광고비를 늘리며 매출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쿠팡 사태 이후,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주문이 15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그로스에 넣어보라", "광고를 올리면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거의 포기한 채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더 낮추지 않으면 아이템 위너에서 제외하겠다는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버티다 보니 결국 노출이 끊겼고, 검색과 그로스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창고에 쌓인 재고와 광고비 부담뿐입니다. 광고비와 수수료, 보관비와 물류비를 빼고 나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정산은 늦고 자금은 막혀, 신제품은 들이지 못하고 식품은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비용과 위험을 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별첨 3

현장사진

※ 추가 사진은 별첨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